

허가 문턱 넘은 한전공대... 한전, 건설·운영비 마련 고민

한국전력이 3일 교육부 대학설립심사 위원회로부터 한전공대 학교법인 설립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2022년 3월 개교를 위한 후속 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돈이다. 주주들은 1조원대 영업적자를 낸 한전의 대규모 출연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 수 밖에 없다. 국가 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프로젝트인 만큼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3일 한전 자료를 보면 한전공대의 성공적인 설립을 위해서는 2031년까지 총 1조6112억원의 자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설립비와 운영비, 개교 이후의 캠퍼스 확장비 등을 모두 더한 액수다.

세부적으로 개교 전인 2021년까지 들어야 하는 돈은 5202억원이다. 편제 완성이 예상되는 2025년까지는 4757억원을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 이후 2031년까지

교육부, 학교법인 설립 허가... 2022년 3월 개교 목표
한전공대 설립·운영·확장비 2031년까지 1.6조 추정
건설비만 6210억... 작년 1.3조 적자 낸 한전에 부담
정부·지자체 도움 기대... 추후 지원 방식 논의 필요

캠퍼스 확장을 위해 6153억원을 더 투입하게 된다.

한전공대 설립비만 놓고 보면 2025년까지 621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는 부지 조성비(330억원)와 캠퍼스 건설비(4060억원), 기계·기구 구입비(1200억원), 시스템 구축비(100억원), 집기비품 구입비(220억원), 수익용기본재산(300억원)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1조3000억원에 달하는 영업적자를 낸 한전으로서 부담스러운 액수

다. 그래도 설립 주체로서 개교 시까지 설립·운영비를 부담한다는 입장이다. 한전 이사회는 얼마 전 한전공대 개교 시까지 3956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편제가 완성되는 2025년 이후에는 정부, 지자체 등과 함께 재정 확보계획 수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전공대 설립은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과제로 추진한 사업이기도 하다.

앞서 전담도와 나누시는 개교 이후 매

년 200억원씩 총 2000억원의 대학발전운영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한전 본사에서 1.8km 떨어진 나주혁신도시 내 부영골프장(CC)도 학교 부지로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도 지자체와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약속했다. 다만 어떤 식으로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는 이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김중갑 한전 사장은 "앞으로 1조원대의 연구를 해야 하는 업계 선두기업으로서 학교에서 융합연구를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한전공대 설립의 이유를 밝힌 바 있다.

한전 관계자는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기존에 정해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영길 기자



광주은행, 'KJB햇살론17' 모바일버전 출시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은행권 공동상품인 'KJB햇살론17'의 모바일버전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출시한 'KJB햇살론17'은 국민행복기금 100% 보증을 담보로, 불가피하게 대부업·불법사금융 등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 이용중인 고객을 제도권 금융으로 포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이번 모바일버전 출시를 통해 개인 및 개인사업자 신청을 충족할 경우 각종 서류를 준비해 은행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모바일을 통해 신청 가능하게 되었다.

'KJB햇살론17' 모바일버전은 국민 행복기금 승인 한도내에서 최대 7백

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기간은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3년 또는 5년 중 선택이 가능하다. 금리는 보증료를 포함해 연 17.9% 고정금리를 적용하며, 성실상환자 및 추가·반복이용자는 요건충족시 해마다 1.0~2.5%p 금리인하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적 3개월 이상인 근로소득자, 사업영위기간 3개월 이상인 사업소득자로서 연소득이 3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저신용자의 경우에는 연소득이 4천5백만원 이하도 신청이 가능하다. /임재일 기자

광주시, '인공지능 산업 산학연합의회' 힘찬 첫발

광주형 인공지능 비즈니스 모델 구현 속도

광주광역시시는 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형 인공지능 비즈니스 모델 구현을 위한 광주광역시 인공지능 산업 산학연합의회' 발대식과 함께 첫 회의를 가졌다.

협의회는 광주광역시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 주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인공지능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민간주도로 조직한 협의체다.

최근 광주로 이전한 인코어P&P, 티맥스소프트, 솔트룩스와 관내 인공지능 분야 기업체, 광주과학기술원, 전남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지역 내 인공지능 관련 기업체·지역대학·연구기관 등 21개 기관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앞으로 회원사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확보, 연구교류를 통한 인공지능 기술 개발 촉진 및 상용화 추진, 인공지능 산업 발

전을 위한 정책연구 등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산업에 발맞춰 민간부분에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날 회의는 임종석 광주테크노파크 인공지능기술지원센터장의 광주 인공지능 산업 현황보고, 인공지능 기업 지원정책 제언과 인공지능 산업발전을 위한 대응방안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임종석 센터장은 "유기적인 산학연 협력체계가 미국 실리콘밸리의 에코시스템을 만들었던 것과 같이 기업과 도시가 더불어 성장하는 광주형 인공지능 비즈니스 모델을 실현하기 위한 산학정책연구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인공지능 기업 기술수요를 중심으로 기업·대학·연구기관·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해 연구개발(R&D), 기술사업화, 지역인재 육성 등에 상호협력



하고 기업하기 좋은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융합공간·시설환경을 조성, 공동 장비 활용, 기업애로기술 자문 등 산학연 협력체계를 만들어 광주시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만들기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광주시는 지난 1월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의 비전과 추진전략 발표와 인공지능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시작

으로 관련 기관과 기업이 광주 이전을 확정하거나 문의해 오는 등 성공적인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앞서 나가고 있다.

앞으로 모든 산업과 연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될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협업을 희망하는 기업과 지역 연구기관, 대학 등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세부적인 과제 발굴, 기술개발 및 이전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전광훈 기자

광주광역시, 6일부터 2020년도 광주 청년 일경험드림 7기 사업을 시작한다.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7기 사업은 당초 3월에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등을 감안해 한 달 연기해 시행된다.

이번 사업에는 310개 사업장에 528명의 청년들이 참여한다. 특히 지연된 일정을 감안해 1일 근무시간을 4시간에서 6시간30분으로 조정하고, 7월까지 4개월 간 근무한다.

또 직무에 대한 적응과 참여하는 청년

광주시,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사업 '시동'

310개 사업장 528명 참여... 7월까지 1일 6시간30분 근무

간 교류를 위해 사업장에 배치하기 전에 진행해온 공통교육은 취소하고, 일경험 기간 중에 별도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한다. 광주시는 지난해까지는 시청 1층 시민홀에서 '드림만남의 날'을 개최하고 청년과 사업장이 만나 매칭하도록 해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화상 면접 등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지난 3월16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된 화상면접에는 총 2487명의 청년이 참여했다.

강영숙 시 여성가족국장 직무대리는

"이번 사업이 코로나 상황으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청년들의 불안한 상황을 일부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사업은 청년의 장기 미취업 상태를 방지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광주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 미취업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청년 일자리 디딤돌 사업이다. /이승원 기자

전남도, '태양광에너지 설치비 지원' 대폭 확대

보조율 55%서 70%로 상향... 설치 가구 부담 완화

전라남도는 안전하고 깨끗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산시키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비용을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전라남도는 태양광을 비롯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설치를 희망한 도내 1천 5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비용 지원비율을 기존 55%에서 70%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해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한 사업으로 지난해 국비와 지방비로 설치비의 55%를 보조했으나 올해 보조율이 70%로 상향, 설치가구는 30%만 자부담하게 돼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전라남도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비 42억을 투입해 1만여 가구에 태양광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보급한 바 있으며, 올해도 지난해 수준으로 도비 5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전라남도는 에너지지원·용량별보

상이한 설치 비용에 맞게 도민들의 자부담금을 줄여주기 위해 도·시군비 지원기준을 마련했다. 태양광(3kW기준)은 106만원, 태양열(14㎡기준)은 102만원, 지열(17.5kW기준)은 210만원, 연료전지(1kW기준)는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실제로 주택에 3kW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면 352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며, 자부담금 151만원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발전설비가 설치된 가구는 매달 4만원의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있어 4~5년 이내 자부담금이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신청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단독·공동주택 소유자가 시공업체와 설치계약을 마친후 오는 13일부터 9월 4일까지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누리집(greenhome.kemco.or.kr)에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062-602-0020)과 시군 에너지업무 담당부서, 전남도 에너지신산업과(061-286-7223)로 문의하면 된다.

/오권철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워라밸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예늬님께서 제안한 슬로건입니다.